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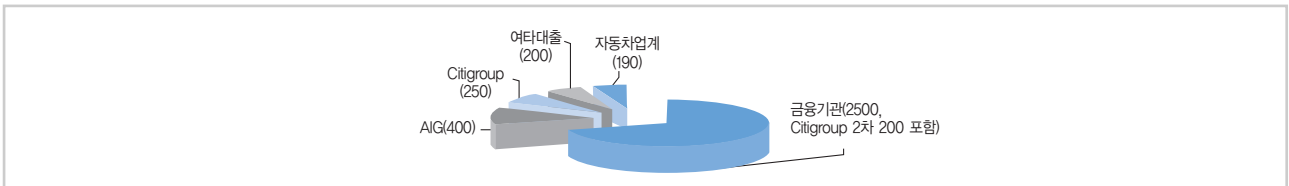
미국의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 제2차 공적자금 투입방향

지난 1월 15일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의 2차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의회 반대 결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1월 20일 공식 출범한 오바마 실행정부로서는 금융시장 위기국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됨. 향후 2차 공적자금 투입은 주택소유자의 차입방지, 금융기관 자본주입 및 부실자산 매입 등에 초점이 맞추어질 전망이다.

- 지난 1월 15일 긴급경제안정화법안(Emergency Economic Stability Act 2008)에 기초한 7,000억 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roubled Assets Relief Program) 가운데 제2차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반대 결의안이 상원에서 부결됨에 따라 1월 20일 공식 출범하는 오바마 실행정부로서는 일단 금융시장 위기사태 재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되었음.
 - 올해 1월 12월 현재 제1차 공적자금(3,500억 달러)은 투입 집행이나 방침이 완료된 상태임.
 - 제2차 공적자금 투입분(3,500억 달러)은 즉시 투입(2,500억 달러)과 대통령 인가(1,000억 달러)가 요구되었던 1차분과는 달리 양원 반대로 투입 자체를 부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부여되었음(신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나 이 경우 정부 대응 지연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감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되었음).

<그림>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제1차 공적자금 투입내역

(단위 : 억 달러)



- 이번 제2차 공적자금 투입방안은 제1차 투입에도 불구하고 Citigroup, J.P. Morgan Chase, Bank of America 등 미국 대형은행들의 실적악화 및 주가급락이 지속된 시점에서 확정됨.
 - 지난 1월 12일 뉴욕증시에서는 Citigroup의 지난해 4/4분기 순이익이 당초 예상보다 큰 적자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도되면서 은행을 위시한 금융업종 주가가 연말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건실한 것으로 인식되어온 J.P. Morgan Chase(시가총액 1위) 역시 경기침체 여파에 따른 연체 및 채무불이행 증가 등으로 인해 4/4분기 결산에서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76% 감소한 주당 7센트를 기록하는 데 그쳤음.
 - 특히 이미 250억 달러의 자금주입이 이루어진 Bank of America는 투자은행인 Merrill Lynch 인수와 관련하여 손실자산 증가 등으로 인해 적자결산을 기록하면서 재무부로부터 200억 달러의 추가 자본투입을 받기로 함.



- 오바마 신행정부는 사전적으로 상기 부실자산 프로그램의 제2차 공적자금 할당을 보장받기 위해 투입기준 내지 조건의 투명성 제고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들을 제시함.
 - 우선 주택시장의 안정 없이는 금융위기 극복은 어렵다는 인식에서 주택압류 방지 및 일시적인 자금부족 주택소유주의 채무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500억~1,0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함.
 - 채무상환부담 경감은 금리인하, 원금감면, 만기연장, 양대 모기지회사(Fannie Mae, Freddie Mac)의 대출상품 제공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공적자금 주입대상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파악, 임원 급여 제한, 배당금 삭감 등 보다 강도 높은 규제조치를 부과하기로 함.
 - 이를테면 급여액이 일정수준을 상회하는 임원의 경우 공적자금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 이전까지 매각이 금지되는 주식 등으로 지급하며, 배당금은 연방감독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기업에 대해서는 변제 완료 시점까지 분기별 배당액을 주당 1센트로 제한하기로 함.
 - 이 외에도 금융기관들은 주입받은 공적자금을 재무구조가 양호한 기업 등을 인수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여타 공적자금 할당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표된 바는 없으나 금융기관 지분출자 지속과 더불어 풀슨 재무장관이 당초 투입방침 변경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했던 금융시장 부실자산 매입이 예상되고 있음.
 - 최근 금융기관들에 대한 자본투입 집중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과 달리 실물부문의 자금공여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서는 부실자산 매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음.

- 연준리 의장인 버냉키 구상에 따르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신규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제조치로서 이후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매입을 통한 재무구조 건전화 대책으로 ① 직접매입 확대, ② 손실보증, ③ 부실자산전문처리기관(Bad Bank) 설립 등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연준리가 실시하고 있는 자산매입 프로그램 대상을 신규발행 소비자대출 담보증권이나 기 발행 상업용부동산모기지 담보증권 등으로 확대할 수 있음.
 - 정부가 일정수준 이상의 손실발생액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모기지대출 채무조정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대가로 채무보증을 제공할 수 있음(〈주간금융브리프(제18권 3호)〉 참조).
 - 당초 공적자금 출자로 설립되는 부실자산전문처리기관은 정부보증채권 발행을 통해 자체적으로 운용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부실자산을 매각하는 금융기관은 공동 소유주로 참가할 수 있는데, 부실자산전문처리기관은 이를 보유·매각하거나 증권화 등을 통해 유동화함.
 - 손실보증 방식은 민간부문 노하우 활용 이점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마다 보유한 부실자산의 성격이 다양·복잡하여 일률적인 적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전히 대차대조표에서 분리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비해 부실자산전문처리기관 방식은 비유동성자산의 공정가격(fair value) 설정 애로 등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적용은 물론 부실자산의 완전한 대차대조표 분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KIF**